Vol.51

2026.3.20.

정책이슈 리뷰

Policy Issue Review

해외동향 EU AI 정책 동향 분석 기반 제조 AX 전환을 위한 제언

'2026 여행가는 봄'과 함께 국내 여행 떠나요 p.7-8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동네 위기, 이웃주민이 먼저 알린다' p.10
보건복지부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p.15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역 간 R&D 협력 가동, '해양수도 부산' 도약 p.18
부산광역시

"산업수도 울산에서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으로" 대전환 본격화 p.21
울산광역시

AI·재생에너지·자치권 혁신 정책 전환과 충남 시사점 p.23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프랑스
EU AI 정책 동향 분석 기반 제조 AX 전환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OECD, 「AI in Manufacturing」, 『EU 인공지능 공동계획 이행 보고서(Volume 2)』, 2023. (웹페이지 업데이트: 2026.02.18.)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rogress-in-implementing-the-european-union-coordinated-plan-on-artificial-intelligence-volume-2_3ac96d41-en/full-report/ai-in-manufacturing_5df4a60d.html

EU 제조업 AX 전환의 로드맵

- 인공지능은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공급망 안정성 강화, 에너지·자원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경제적·환경적·전략적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크나, 실제 도입은 파일럿 수준이나 제한된 기능 범위에 머물고 있음
- 주요 장벽으로는 고품질·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부족, AI 역량을 갖춘 인력 부족, 인프라 및 초기 투자 비용 부담, GDPR·EU AI Act 등 복잡한 규제 환경이 꼽힘
- Manufacturing-X 등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I 팩토리 및 공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현장 교육 강화, 분야별 규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EU 제조업 AI 도입, 어디까지 왔나

- EU 제조업은 3,000만 명을 고용하고 전체 부가가치의 약 16%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AI는 예지보전, 품질 보증·검사, 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 가동률 향상, 불량률 저감 등 실질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님
- 현재 도입은 텍스트 마이닝, 음성인식 등 텍스트 기반 관리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지 인식·로보틱스 통합 등 핵심 생산 공정 영역으로의 확산은 아직 제한적임
- AI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 중 AI 관련 역량 보유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하며, 인재 확보와 현장 역량 강화가 도입 확산의 핵심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음

Figure 1.1. EU 인공지능 공동계획의 4대 핵심 축

출처: OECD (2026),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European Union 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ume 2) : Uptake in High-Impact Sec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ac96d41-en

Figure 4.7. EU 제조기업의 AI 활용 사례

제조업/전체 산업에서 AI를 사용하는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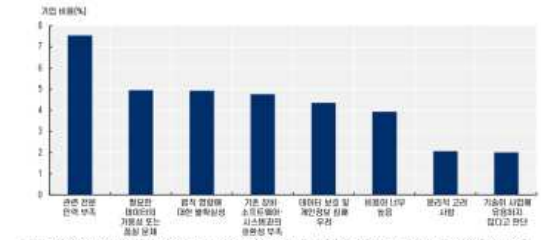
출처: OECD (2026),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European Union 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ume 2) : Uptake in High-Impact Sec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ac96d41-en

2030을 향한 EU의 AI 도전

- EU는 Coordinated Plan on AI를 토대로 연구·인프라·시범사업을 지원하고, EU AI Act를 통해 안전성과 책임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데이터 공유 및 산업별 표준화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접근 가능한 자금 및 시범 플랫폼 제공, 산업용 AI 테스트베드와 공동 AI 컴퓨팅 허브 등 공유 인프라 구축, 제조업 특화 AI 팩토리 및 벤치마크·검증 체계 마련,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재교육·업스킬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30년까지 공공·민간 연간 투자 규모를 최소 200억 유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술 인프라·인력 양성·규제 명확성을 묶은 패키지형 지원이 제조업 AI 확산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음

Figure 4.11. EU 제조업의 AI 도입 장애 요인

직원 10인 이상 기업 기준 비율



출처: OECD (2026),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European Union 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ume 2) : Uptake in High-Impact Sec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ac96d41-en

Table 4.2. 제조 AI 활용 영역별 적용 구조 및 효과

구분	예지보전 (Predictive Maintenance)	품질 관리/검사 (Quality Assurance / Control)	공급망 최적화 (Supply Chain Optimization)
AI 작동 방식	• 센서 데이터 기반 이상 탐지 및 고장 예측 • 과거 데이터 학습으로 고장 시점 예측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지원	• 이미지·센서 데이터로 결함 탐지 및 분류 • 공정 데이터 분석으로 품질 편차 조정 • 비전 기반 검사 및 패턴 인식 활용	• 수요 예측 및 조달 자동화 • 물류·재고 데이터 기반 최적화 • 리스크 예측 및 동적 스케줄링
필요 데이터	• 진동·온도·압력 등 시계열 센서 데이터 • 장비 로그 및 유지보수 기록 • 고장 라벨 데이터	•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 • 센서 데이터(온도, 압력 등) • 제품 사양 및 공정 파라미터	• 판매 데이터, 재고, 물류 데이터 • 공급업체 성능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뉴스, 이메일 등)
주요 효과	• 다운타임 감소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설비 수명 증가 • 운영 효율 향상	• 불량률 감소 • 검사 속도·정확도 향상 • 공정 안정성 및 추적성 개선	• 수요-공급 균형 개선 • 재고 비용 절감 • 공급망 회복력 향상 • 물류 효율 개선
경쟁력 효과	• 설비 신뢰성 향상 • 산업 생산성 강화 • 제조 경쟁력 확보	• 품질 인증 및 신뢰성 향상 • 수작업 검사 감소 • 제조 경쟁력 강화	• 공급망 탄력성 강화 • 지속가능 전략 지원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출처: OECD (2026),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European Union 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ume 2) : Uptake in High-Impact Sec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ac96d41-en

EU AI 정책 기반 충청남도 활용성 및 개선사항

- 충청남도는 EU의 제조 중심 AI 확산 정책을 참고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지역 주력 제조업에 AI를 접목하고, 예지보전·공정 최적화·품질 검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행 중심 AX 로드맵 수립 및 제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음
- 행정부서·제조기업·이해관계자가 AI 도입의 핵심이 데이터와 현장 인력 역량에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 데이터 기반 실습형 교육과 기업 맞춤형 AX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기획–실증–확산으로 이어지는 제조 AX 실행 구조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PoC 중심의 단편적 도입을 넘어 실제 생산 공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가 요구되며, 중소 제조기업 대상 AI 도입 플랫폼과 공정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 기반의 협력 생태계 및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이 필요함

강 우 현 브레인웍스 대표(AI·BigData 전문가)

- ✓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예지보전·공정 최적화·품질 검사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 활용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 규모와 디지털 역량 수준에 맞는 단계적 AX 전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공정 데이터 수집·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 제조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 데이터 기반 실습형 교육과 기업 맞춤형 AX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 행정·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 환경을 마련하여 기획–실증–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제조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추진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산·학·연이 함께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향해 달린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03.05.

과기부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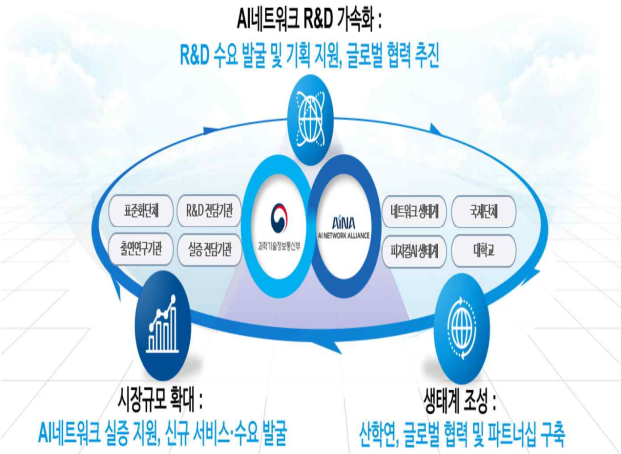
- 배경 : 글로벌 통신 시장이 차세대 6G 및 AI네트워크 생태계 선점을 위해 AI-RAN(지능형 기지국) 등 핵심 인프라 확보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산·학·연 역량 결집 필요
- 출범식 : 2026.3.4.(수), 스페인 바로셀로나 'MWC2026'
- 참여규모 :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통신3사(SKT, KT, LGU+)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 AI기업(AWS) 등 총 34개 기업 및 기관
- 비전 : 2030년까지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 및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20% 달성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내 기술 강화와 시장 진출 확대

- 글로벌 협력 성과 : AINA, AI-RAN 얼라이언스,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SUTD) 간 협력 MOU 체결, 삼성전자 등 '코리아팀'과 엔비디아(NVIDIA) 간의 AI-RAN 협력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가시적 결과 도출 예정
- 시장 진출 확대 : LG전자·삼지전자 등이 미국에 개방형 기지국(Open RAN) 100억 원 이상 수출 예정, LIG아큐버가 미국·일본에 5G 스몰셀 약 200억 원 규모 수출 달성
- 예산 지원 : 2026년부터 AI-RAN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약 1,287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
- 신규 사업 : 2027년부터 기지국에 AI 컴퓨팅을 융합하는 'AI-on-RAN' 등 전방위적 경쟁력 강화 사업 기획

AINA는 국내 AI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 기술 고도화 :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AI와 통신이 융합된 AI-RAN 등의 핵심 기술 확보를 지원
- 수요 창출 및 실증 : 제조, 캠퍼스, 공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AI네트워크 서비스와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
- 생태계 조성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AI-RAN 인프라 구축 : 기지국이 AI 컴퓨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실시간 초정밀 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지컬AI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프라를 지향



최 창 규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위원

✓ 충남형 AI네트워크 혁신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AI-RAN 기반 지능형 제조혁신단지(Smart Factory) 조성, ②충남권 대학-기업 연계 'AI네트워크 캠퍼스' 특구 지정, ③도내 통신 장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④공공 안전 및 도민 체감형 'AI-on-RAN' 서비스 도입 등의 사업을 제안

✓ 도내 산·학·연 역량 결집으로 정부 'AI네트워크 1등 국가' 사업을 통한 도내 공공·산업 영역의 AI 도입률 증가와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교육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로 지역의 활기를 이끈다. 2026.03.10.

1. '평생학습도시'란?

- (개념)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는 도시를 말함
- (현황)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6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20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음(전국 기초자치단체*의 91.2%)

* `25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 총 226개

2.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목적)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기초자치단체가 조직, 인력, 예산 등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
-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모델을 발굴 및 육성

3. 2026년 평생학습도시 5개 신규 지정 및 광역형 평생학습 지원 추진

- (신규 지정) 2026년 5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
- (광역 단위 지원) 2026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대학, 기업 등과 여러 평생학습도시가 함께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진흥을 선도할 계획

4. 기존 평생학습도시 중 9개 지역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재설계

-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중 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색깔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
-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는 인공지능(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

< 2026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

지자체	주제
강원 고성군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중심 청정 배움터 고성
경북 김천시	무한대로 평생학습도시 김천
경북 울릉군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 에메랄드 울릉
서울 서초구	배움으로 하나되는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서초구
전남 장성군	문(文)불여장성, 배움의 문(門)이 되는 도시

< 2026년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

지자체	분야
강원 정선군, 전남 곡성군, 전남 나주시	지역 현안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인공지능(AI)·디지털
제주 제주시	인공지능(AI)·디지털 및 지역 현안

김 태 성 충남라이즈센터 부연구위원

✓ 평생학습도시 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군-대학-기업 공동 협력 기반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 전반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충남형 광역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있음

✓ RISE 사업과 평생학습 정책을 연계하여 학위-비학위를 통합한 지역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2.23.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 실시, 결과 확정·발표

-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 기초 226)가 한 해 동안 지방행정혁신을 위해 기울이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 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 등 61개(광역 4, 기초 56) 지방정부 선정

평가군별 최우수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 선정

- 광역에서는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를 비롯,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 기초에서는 최우수기관인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전북 무주군, 서울 양천구 등 57개의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2025년 평가항목 혁신역량·혁신성과·자율지표로 구성, 10개 세부지표로 세분

- 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따라 소통과 협력,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지표에 반영
- 평가는 지역마다 다른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광역, 시, 군, 구의 4개 평가준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

우수시관 정부 포상수여 및 우수 혁신사례의 배포

-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이번 평가에서 발굴한 우수 혁신사례를 모든 지방정부에 널리 알릴 계획
- 또한, 맞춤형 자문, 혁신 지도(멘토링)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방행정 전반의 혁신수준을 향상시킬 계획

광역(4)	기초(57)		
	시(19)	군(21)	구(1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기 수원시, 부천시,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전북 정읍시 경북 구미시, 영천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전남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경북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경남 하동군, 거창군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고 승 희 자치전략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 지방정부의 혁신은 충남의 맞춤형 디지털, 규제, 참여, 조직혁신을 축으로 종합계획 및 실행과제와 주민체감, 성과확산 수준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함
- ✓ 중앙정부의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참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의 지방정부별 중장기 혁신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

'2026 여행가는 봄'과 함께 국내 여행 떠나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6.03.16.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 표어로

-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국민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 제공, 국내 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4월-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추진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26.2.25)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 실현을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
-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채택
-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1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가벼운 주머니로 떠나는 봄철 여행

❶ 철도

-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 구매 고객 대상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 제공
-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 방문·인증 시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수령 가능
-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 제공
- 혜택 제공 기간 및 대상: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9만 명에게 제공

❷ 항공

- 국내 왕복 노선 대상(일부 노선 제외),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구입 시 1인당 5천 원(최대 2만 원/4명까지)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제공
- 혜택 제공 기간 및 대상: 탑승 기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7만 명에게 제공

2 '2026년 봄맞이 숙박할인페스타', 연박 할인권 신설로 지역 체류 관광 확대

❶ 숙박할인

- 4월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 배포
- 할인권은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

*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 제공

❷ 패키지 할인전

-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 확대를 위해 연박 할인권 신설
-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인 경우 7만 원, 14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 제공. 연박 할인원은 약 1만 장 배포
-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배포 수량 상이함

3 특별할인

❶ '지역사랑 휴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뒷받침

-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 기간에 시작
- 4월부터 사업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
- 대상 지역: 강원(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의 신청 확인 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확정을 거쳐 여행경비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 가능

3 특별할인

❷ 여행상품 할인, '5월 바다가는 달'

- 다양한 여행 수요 충족을 위한 취향 저격 여행상품과 지역 연계 특별 지원 등 맞춤형 혜택도 마련
- 3월 26일부터 지마켓,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국내 여행상품 최대 40%(5만 원 한도)까지 할인 제공,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 가능
- 연안·어촌·섬 지역 여행 지원을 위해 바다여행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 추진
- 연안 지역 대상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 혜택 제공,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은 5만 원까지 할인
- 해양 레저상품은 1만 원 이상 상품 30%(1만 5천 원 한도)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상품은 결제액 기준 30% 할인(당일/1박: 5만 원 한도, 2박 이상: 7만 원 한도) 제공

3 특별할인

❸ 근로자 휴가 지원으로 더 특별하게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 (vacation.benepia.co.kr)'에서 전국의 숙박, 입장권, 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전북 지역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원

4 이벤트

❶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여행콘텐츠와 행사로 여행의 재미 배가

-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필사 등, 5가지 주제로 총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총 1천 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 선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 추진.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0인이 참가해 100가지 여행을 주제로 국내 여행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로 명소 선정

❷ 지자체와 유관 기관 동참으로 지역관광 대도약, 여행의 풍성함 더해

-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
  - 광주 동구: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 식음료 및 숙박 할인 제공
  - 영월군: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최대 50% 할인
  - 인천, 동해, 대구 등: 시티투어 버스 할인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5월 한 달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50% 할인
-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 마련

김 경 태 문화·관광연구팀 연구위원

✓ '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교통·숙박·상품 할인과 지역화폐 환급을 결합하여 관광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구조를 보여줌. 이에 따라 충남은 단순 관광객 유입 확대보다 체류기간 증가와 지역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정책 설계 필요

✓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숙박·체험을 연계한 패키지형 관광상품과 지역화폐 기반 환류 구조를 도입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도 단위에서 시군을 묶는 광역형 관광패스 및 연박 인센티브 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앙정부의 캠페인과 연계한 충남형 시즌 관광캠페인(예: 해양·농촌·백제문화 연계)을 통해 관광수요를 전략적으로 분산시키고, 나아가 지역 MICE·축제와 결합한 체류형 관광클러스터로 확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범위 확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2.24.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창출
  - '25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11개 수상팀 중 제조가공 4개팀, 농촌 유·무형 자원 활용 창업 7개팀
  - 업타운(강원 홍천) 사례 : 마을주민과 함께 유휴시설 등을 활용농촌 체류 콘텐츠(촌캉스, 농활학교 등)를 기획, 농촌관광으로 연결(4년간 누적 프로그램 이용객 1만명)
-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현장 수요 증가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유형 신규 도입으로 농촌융복산업 사업자 인증 범위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26년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신규 유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
- 기존 인증 기준과는 차별화되게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과 지역 정체성, 지역공동체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모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인증시 컨설팅 및 자금(융자) 등 지원

- 향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 자금(융자),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인증 비교(요약) >

구분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사업 형태	• (1차) 원료농산물 × (2차) 제조·가공 × (3차) 체험관광·서비스업 등 • (1차) 원료농산물 × (2차) 제조·가공 • (1차) 원료농산물 × (3차) 체험관광·서비스업 등	• (2차) 제조·가공 × (3차) 체험관광·서비스업 등 • (2차) 제조·가공 • (3차) 체험관광·서비스업 등
소득 기준	•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8백만 원' 이상	• 좌동
기본 인프라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 농촌지역 내 창업 관련 시설
농산물 사용	• 주원료는 국산 농산물 사용 • 지역 농산물 50% 이상 사용	• 농산물 사용 시 국산 농산물 사용
지역자원 활용	• 지역 농산물 사용 • 가공시설 등 지역 시설 연계·활용	• 식문화·경관·교육 등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유무형 자원 활용
지역 사회 연계·상생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역농업과의 연계 및 활성화 기여	• 지역 공동체(주민·단체·조직)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 연계 • 지역주민 고용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과 조화

조 영 재 농정혁신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농업·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의 가치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농촌창업 활성화 기대

✓ 농촌공간을 단순한 식량생산의 1차산업 공간을 탈피하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면적 기능 및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

보건복지부

‘우리동네 위기, 이웃주민이 먼저 알린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우리 동네 위기, 이웃주민이 먼저 알린다...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확대. 2026.03.05.

1. 복지위기 알림 앱 개요

- (배경)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식을 보완하고 복지위기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개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앱(app) 활용
- (의의) 국세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위기가구 발굴 강화

2. 주요 내용

- (이용자)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 등 업무 유관자
- (위기 알림 대상)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이웃 :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일상생활, 주거지원, 일자리, 채무 · 법률 등
- (알림정보) 위기상황, 가구유형 및 대상자 정보(성별, 주소, 알림내용 등)

3. 실제 지원사례

- 전기검침원 T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A씨집에 방문, 방문 당시 A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애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 검침원 T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고 위기알림은 곧바로 A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됨
- 주민센터 담당자는 A씨와 상담을 통해 쌀,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컵밥, 통조림)등을 지원함

4. 향후전망 및 계획

- 보건복지부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 활발하게 추진 중 : ‘25년 한전 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26년 기관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 : 3월부터 국세청 국세 체납 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
-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 추진 예정

복지위기 알림 앱 설치 및 사용방법

위기가구를 위한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사업’

김 용 현 자치전략연구팀 연구위원

✓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과 병행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 등 지역사회 내 인력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발굴체계 구축이 필요

✓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충남도는 복지 알리미 앱 홍보를 위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편 홍보 등의 방법을 생각해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대응과 물-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 확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2026.02.25.

기후위기 대응과 물-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 출범

- 포럼은 물-에너지 넥서스(Water-Energy Nexus)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물과 에너지 분야의 정책·기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출범
- 포럼은 공공기관, 학계·산업계가 함께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며, 과제별 테스크포스(TF)를 병행 운영하여 과제별 세부 실행단계에서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물-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 확산

포럼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달성

- 포럼에서 물-에너지 기능을 융합하는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추진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
- 포럼을 통해 물과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협업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

물-에너지 융합 과제 목록(안)

과제명	주요내용
가성비 높은 물 배터리 확대	기존 댐을 하부 저수지로 활용하여 환경성·경제성·주민수용성을 제고한 양수발전 확대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기존 대형건물 위주에서 공동주택·도시 단위로 공급을 확대, KS인증 제정, 하수열 활용 등 기반 강화
발전댐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발전댐 다목적 활용을 통해 홍수 대응력 강화
K-기후 원팀 해외 진출	수력+전력망, 발전소+담수화, 수력+물 공급 등 3개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협력사업 적극 수주
하수처리장 태양광 확대 및 데이터센터 입지화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신속히 확대하고, 하수처리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수로 활용하고 폐열을 난방에 재활용하는 솔루션 도입
전력, 수도 AMI 통합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한전 AMI와 수도AMI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여 수도 원격 검침 도입 비용 절감(30%↓), 기후테크 육성 및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등
기후 인프라 복합화를 통한 도시공간 효율화	물 관리시설(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과 변전소, 지역난방 등을 통합 운영하는 도심 용지 활용 방안 마련, 전력·수도 지하 공사 시 통합 공사로 주민 불편, 비용 최소화
지산지소형 전력-용수 통합 공급	신설 LNG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통합 구축, 폐쇄 화력발전소 취·배수시설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담수화 사업 방안 마련
다목적댐의 발전 효율화	다목적댐의 일·시간대별 발전량을 전력수요 패턴에 맞춰 보다 정교하고 유연하게 조정·운영함으로써 물-에너지 연계 강화
수소 생산 기반 강화	수력 연계 MW급 수전해 기술력 확보·실증 및 국내외 확대 적용
물관리 시설을 전력 수요관리 자원으로 활용	물 인프라의 유체저장능력(배수지, 집수정 등), 비연속공정 운영 속성을 활용해 가상 배터리(VPP) 및 수요관리 자원(DR)으로 전환 시범사업 추진
발전소의 물 기자재 국산화	발전산업 분야 물 기자재 공급망 다변화 수요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 위주인 물산업 판로, 해외 진출 지원

김 영 일 환경에너지생태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물-에너지 융합 포럼에서 논의할 물-에너지 융합 과제 가운데 충청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지역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물-에너지 신규 융합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UAM) 동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강 거점 K-UAM 종합실증 본격화, 2026.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예타 착수, 2026.01.30

1. 도심항공교통(UAM)이란?

- (개념) 저고도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항공기를 활용하여 도심 내 단거리·고빈도 운항을 목표로 하는 미래 교통체계임
- (필요성) 기체 안전성뿐 아니라 도심 내 통신·항법 신호 혼잡 및 버티포트 연계 등 운용환경 전반의 통합 검증이 필수적임
- (단계별 실증) 개활지에서 시작하여 도심지로 실증 범위를 확대하며 실제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 검증함

2. K-UAM 2단계 도심 실증 및 버티포트 구축

- (실증 거점) 국토교통부는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고양특례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본격 조성함
- (시설 규모) 대지 15,085m² 규모에 이착륙장 1곳, 계류장 2곳,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상용화형 종합실증 거점으로 구축됨
- (표준 정립)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여 물리적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종합 반영한 한국형 버티포트 모델을 정립함

3. 향후 전망

- (데이터 활용) 실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기준 마련에 활용함
- (산업 활력) 민관 합동 실증으로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임
- (인프라 확충) 올해 안으로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하고 '27년까지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임

4. 시사점

- 국가 차원의 2단계 도심 실증 본격화에 맞춰 대도시가 없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UAM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 서해안 도서(섬)지역의 관광 수요를 흡수함과 동시에 의료·물류 등 취약한 공공서비스를 보강하는 차별화된 충남형 UAM 항공허브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산공항 중심의 인프라 발굴과 내륙의 백제·내포문화권을 잇는 초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함

버티포트 조감도

단계별 시행 대상지

오 용 준 지역도시연구팀 수석연구위원

✓ 도내 서해안 관광벨트와 도서 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섬과 육지를 잇는 도서관광 및 공공서비스 특화 버티포트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함

✓ 충남도 내 자동차 부품 산업 역량을 UAM 핵심 부품 제조 분야로 전환 지원하고, 서산공항을 기점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된 초광역 하늘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국토교통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 '28년 UAM 상용화…국민이 체감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마련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2026.02.26.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

- 국토교통부,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수립
-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
- 이에 따라, AI 기반 5대 모빌리티 분야 혁신 전략 포함

(자율주행 강국도약) '27년 AI기반 레벨4 완전자율 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본격 추진

- '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
-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 표준화하여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 본격화 계획

(도심항공 모빌리티) '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 및 '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 본격 지원

- 이를 위하여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구축
-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 '실증 → 초기 상용화 →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탄소중립 모빌리티)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 '30년 40%→'35년 7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35 지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하여 배터리 안전성 향상
-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사업과 제도화 추진,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 시행

(일상 모빌리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

- 자율주행 기술도입 준비, 공공플랫폼 구축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 마련
- 법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통합교통서비스 앱 고도화 추진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 추진

-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지원
-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제정 등

(재)충남테크노파크

✓ **정부의 「2030 모빌리티 혁신 성장 로드맵」에 부합하는 충남형 AI 기반 모빌리티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충남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도내 다수의 모빌리티 관련 중소 제조기업은 경험·자본·전문인력 부족으로 AI 도입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AI·R&D·실증 전문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기반 모빌리티 산업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해양수산부

'25년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 21% 감소'... 연안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연안침식 우려·심각 지구 21%p 감소, 연안관리체계 고도화한다' 2026.03.05.

1.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라 200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 중
  - 모래사장의 폭과 넓이 등을 측정하여 지구별로 침식등급* 산정

* A등급(양호): 안정적인 상태, B등급(보통): 침식 있으나 비교적 안정, C등급(우려): 침식피해 우려, D등급(심각): 침식 피해 가능성 높음

- 2025년은 동해안(강원·경북) 전역과 서·남해안의 2024년 침식 '우려·심각지구(C·D)'를 중심으로 총 229개 지구 조사 실시

2. 2025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 2025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구의 비율이 지난해 65.3%에서 44.4%로 20.9%p 줄어듬
  - 225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우려·심각(C·D) 지구'는 100개소(44.4%)로 나타남
- 140개는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침식이 개선된 73개 지구는 등급 상향, 침식이 심해진 12개 지구는 등급이 하향

3. 연안침식 취약도 감소 이유

- 2025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고 2.5m 이상의 고파랑 빈도가 감소*
- 해양기후적인 요인 감소과 함께, 그간의 연안침식 관리·대응 정책 성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전년 대비 고파랑 출현빈도 32.5% 감소, 지속시간 36.4% 감소

- 실태조사 결과는 연안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누리집(https://coast.mof.go.kr) 자료실에서 확인

4. 정책 추진 방향

- 침식 등급이 하향된 12개 지구의 침식 방지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검토
- '26년부터 조사대상 지구를 368개소로 늘려 침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연안재해 대비 완충공간 확보, 동해안 지역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연안보전기준선 설정 확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과학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안지역 조성 지속 추진

5. 분석지구 전년대비 침식등급 변화

■ : 등급상향(73), ■ : 등급하향(12), ■ : 등급유지(140), 신규(4)

2024년 (225) \ 2025년 (225)		양호(A) 24	보통(B) 101	우려(C) 81	심각(D) 19
양호(A)	8	8	-	-	-
보통(B)	70	10	54	6	-
우려(C)	123	6	46	65	6
심각(D)	24	-	1	10	13

윤 종 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 이번 실태조사에서 충남도 조사해안 17개소 중, A등급 1개소, B등급 4개소, C등급 11개소, D등급 1개소로 우려/심각 비율이 70.6%에 달함(전국 평균 44.4% 대비 높음)

✓ 이는 '24년 조사결과 중 충남도 조사해안의 우려/심각 비율인 45.2% 보다 높아진 수치임

✓ 향후 조사대상 연안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해안가 침식확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안정비사업과 국민안심해안사업(국비확보 연계)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정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2026.02.23.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6년 2월 23일 발표
  - 미국에서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
- 동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 간 정책협력체제 구축
  - 중기부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방사청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략1) 혁신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입 기회 확대

-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AX 과제를 지원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계획
- 민간의 우수 기술·연구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

(전략2) 방산 스타트업 성장 지원정책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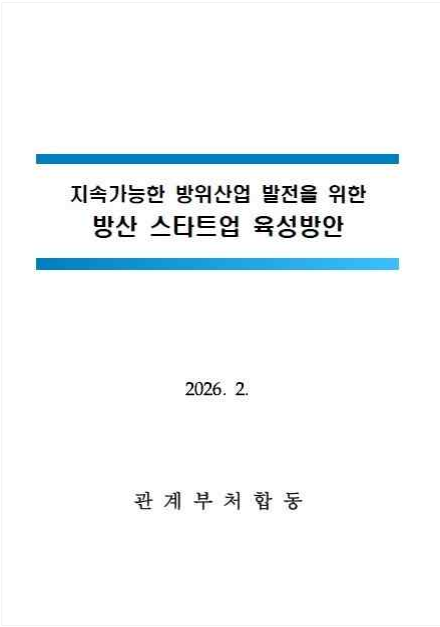
- 개발 시작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하여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 수행
- 반도체·AI등 첨단 분야와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 추진

(전략3) 방산 참여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 방산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 실시
-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 개선
- 국산 부품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

(향후 추진계획) 방산발전추진단 운영

-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이번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
-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2026. 2.

관 계 부 처 합 동

이 관 률 경제·산업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 Defense 창업중심대학 및 방산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유치
-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

한국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인공지능 활용 시대,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 본격 논의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 K-콘텐츠 인공지능 활용 시대,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 본격 논의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2026.02.24.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 콘텐츠산업별 인공지능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인공지능 콘텐츠 확산 속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모색

-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영상·음악·웹툰·게임 등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등 기준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인간의 창의성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

게임·웹툰·영상·음악 등 콘텐츠산업 전문가 참여, 현장 중심 개선 과제 제안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발표 및 국내 인공지능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제시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재)충남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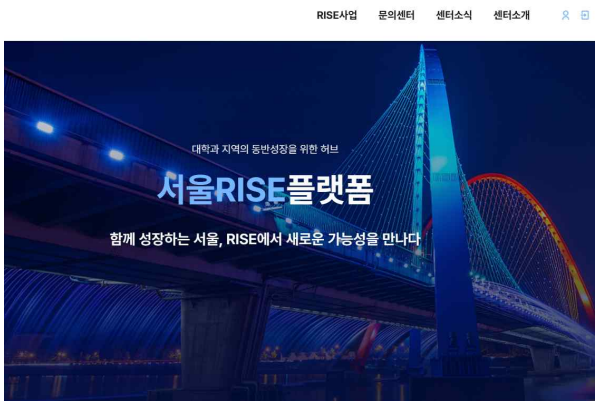
✓ 지역 내 콘텐츠 창작자(영상·음악·웹툰 등)를 대상으로 AI 활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아울러 콘텐츠를 이해하고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충남 콘텐츠산업의 AI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 필요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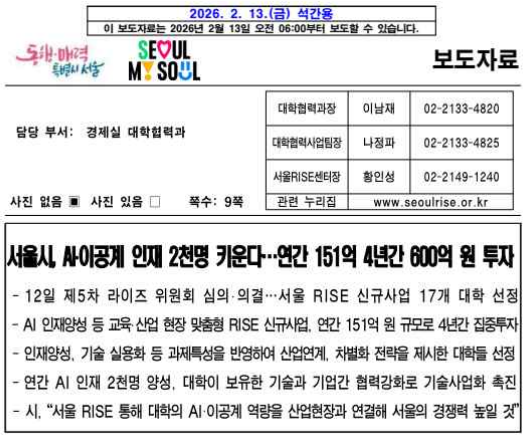
서울 RISE, AI 시대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본격 추진

출처: 서울RISE센터 홈페이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홈페이지



AI 인재양성 중심 서울 RISE 본격화

- 서울시는 AI 대전환 대응을 위해 연간 151억 원, 4년간 약 600억 원을 투입하여 AI·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함
- 서울형 RISE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AI를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하여 인재양성과 기술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구조를 확립함



2026. 2. 13.(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1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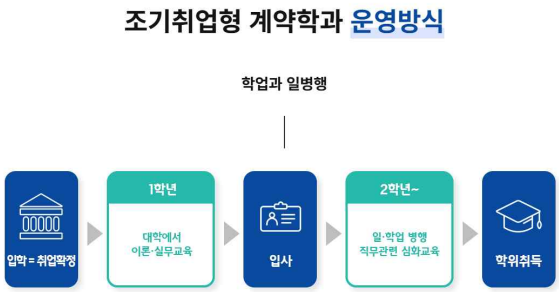
담당 부서: 경제실 대학협력과	대학협력과장	이남재	02-2133-4820
	대학협력사업팀장	나정파	02-2133-4825
	서울RISE센터장	황인성	02-2149-124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9쪽	관련 누리집	www.seoulrise.or.kr	

서울시, AI·이공계 인재 2천명 키운다…연간 151억 4년간 600억 원 투자

- 12일 제5차 라이즈 위원회 심의·의결…서울 RISE 신규사업 17개 대학 선정
- AI 인재양성 등 교육·산업 현장 맞춤형 RISE 신규사업, 연간 151억 원 규모로 4년간 집중투자
- 인재양성, 기술 실용화 등 과제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연계, 차별화 전략을 제시한 대학들 선정
- 연간 AI 인재 2천명 양성,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간 협력강화로 기술사업화 촉진
- 시, "서울 RISE 통해 대학의 AI·이공계 역량을 산업현장과 연결해 서울의 경쟁력 높일 것"

AI 학과 사업 11개교 · 서울형 BRIDGE 10개교 선정

- AI 관련학과 지원사업은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고도화를 통해 연간 2천 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됨
- 총 11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별 5~6억 원을 지원하며, 교과목 개발 및 이수 기반 인재 양성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됨
- 서울형 BRIDGE는 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학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및 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연 6.5억 원을 지원



AI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3개 대학 선정'

-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
- 3개 대학에 대학별 10억 원을 지원하며, 안정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간평가 없이 4년간 지속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AI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

박 희 원 충남라이즈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은 충남형 계약학과를 통해 인재양성 체계를 AI 등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이에 맞는 대학-기업 연계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술사업화(BRIDGE) 기능을 보완하여 AI 수요 기반 기술이전·창업까지 연계하는 통합형 RISE 모델 구축이 요구됨

부산광역시

정부·지역 간 R&D 협력 가동, '해양수도 부산' 도약

출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정부·지역 간 R&D 협력 가동을 통한 해양수도 부산 도약. 2026.02.25.
2026년 부산광역시 주요업무계획. 2026.01.26

해양수산 R&D 전문기관 간 협력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과 데이터 중심 해양수도 도약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 간 협력 본격화
-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및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 간담회 개최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해양 신산업 발굴 및 글로벌 해양 거점 조성

- 공동 정책연구, 전략 R&D 과제 발굴 단계적 확대
- 해양수산 국가 R&D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 계획
- 북항재개발 지역 등에 세제 혜택을 담은 특구조성, 보험, 중재 등 해양 소프트파워를 강화

(사업내용) BISTEP-KIMST 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협력

- BISTEP과 KIMST가 협력 회의 개최(2026.02.25.)
- BISTEP '해양사업기획팀'을 신설, 공동연구 추진

(사업내용) 해양 수도권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정책 반영

- AI해양데이터센터 설립 등 초광역 프로젝트 구체화 논의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세제 혜택 특구 조성
- 해수부-지자체-지역 상의 간 상설 협의 기구 설치 검토

한화오션 부산엔지니어링 센터 유치(1.22.)

글로벌 해양수도 추진위원회 출범식(8.28.)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과 전략」선포('25.8)

박 수 경 충남라이즈센터 선임연구원

- ✓ 충남의 해양자원과 연계된 충남형 해양 글로벌 R&D 협력모델 및 해양레저 관광도시(Sea & Leisure Region)를 조성하여 RISE 사업 내(보령-서천) 해양 신산업 전략과제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충남 내 해양사업 연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업 세제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국내 최초 도시 전역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출처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올 하반기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200대 운행...광주시, 대한민국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2026.01.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 2026.01.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행 통합 지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2026.03.09.

광주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

-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를 국내 최초 '도시 전역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
-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리빙랩으로 전환하여 복잡한 도로환경에서 레벨4* 자율 주행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도시형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시행

* 레벨4: 운전자 개입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모든 운전을 수행하는 단계

- 국비 61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
- 전담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민관 협력기반 'K-자율주행 협력모델' 구축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 지원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을 선정
-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통해 기술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율주행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제약 없이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환경을 조성
- 협력모델 기업
  - (자동차 제작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전용차량(SDV) 개발·공급하고, 차량정비 및 개발 인력 현장 지원
  - (보험사 '삼성화재')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 및 고객창구 운영,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및 사고예방 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 지원
  - (운송플랫폼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량과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상용화 서비스 실증

도시 전역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정책 전략

- 목표: 자율차 3대 강국 도약(국정과제 31)을 위한 E2E AI 기술 확보

* E2E(End-to-End): 하나의 AI 모델에서 통합 처리(입력→AI→출력)

- 전략: 민간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AI 인프라 지원
  ① 도시 단위 규제 없는 실증환경 조성
  ②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③ 대규모 AI 학습데이터 확보
  ④ 24시간 실증 및 안전관리
  ⑤ 도전적 실증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비전 조감도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

임 성 아 충남라이즈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 역시 자동차·부품 산업 기반과 스마트 교통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세계지방정부연합 통해 글로벌 협력 확대

출처 : 해럴드경제, "대전시, 유럽 기술 시장에 '과학수도' 깃발", 2026.02.23.
굿모닝경제, "대전시, 유럽 기술시장 공략… 스페인 경제과학 사절단 파견", 2026.02.23.
국민일보, "대전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회장도시 재선출", 2026.02.23.
UCLG, "UCLG World Congress", https://uclg.org/uclg-world-congress

대전시, 유럽 기술 시장 진출 전략 추진

- 대전시는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확대와 유럽 기술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과학사절단을 스페인 말라가에 파견
- (사절단 구성) 대전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약 4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 참여
- (주요활동 및 추진 내용) ①국제 협력행사 참여(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제2회 총회, 세계혁신도시 포럼,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의), ②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한밭대-말라가대 공동 포럼, 충남대 인공지능 세미나, 과학기술 연구개발 세션, 지역 투자유치 전략 공유회), ③ 유럽 기술시장 진출 기반 구축(지역 연구기관 기술 홍보, 글로벌 기술 이전 협력 확대, 유럽 투자 및 기업 협력 발굴, 대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정책적 의의) ①지방정부차원의 과학기술 기반 도시외교 모델 구축이라는 우수사례 평가, ②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연구 협력 확대 기여, ③지역 연구기관 및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2024년 과학기술 기반 산업과 혁신 생태계를 가진 도시들이 협력하기 위해 만든 국제 네트워크로 대전에서 공식 출범
- (회원도시) 대전(한국), Málaga(스페인), Dortmund(독일), Seattle(미국), Montgomery County(미국), Québec Province(캐나다) 등 총 6개
- (주요활동) ①과학기술 기반 도시 외교(지방정부 중심 기술협력 네트워크), ②글로벌 혁신도시 협력(R&D, 산업화, 기업협력 등), ③지역 산업 전략 연계 등
- (주요내용) GINI 상설 사무국을 대전시에 설치, GINI 제2대 회장도시로 대전시 재선출
- 제2회 총회 논의 주제
  - ①과학기술 기반 산업 협력(반도체, 바이오헬스, 양자, AI, 로봇, 우주항공), ②글로벌 혁신도시 협력 플랫폼 구축, ③국제연구 협력 논의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세계지방정부연합) 1913년에 설립되어 전세계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장 큰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
-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주거환경 향상 도모, 지역사회 경제발전 지원, 국제적으로 자치단체 간 정보와 정책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 노력
- (주요목적) 지방정부의 글로벌 대표성 강화, 도시 간 협력 및 정책 교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국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확대
- (주요활동) ①세계 지방정부 총회, ②글로벌 도시 의제 연구, ③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협력
- (회원현황) UN 193개 회원국가 중 140개국 250,00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로 구성
- (기타) 대한민국에서는 총23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양, 당진, 전주, 군산, 구미, 안동, 창원, 시도지사협의회) 가입

2026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 개최 계획

- (행사명) UCLG World Congress & World Summit of Local and Regional Leaders
- (개최지) Tangier, Morocco
- (개최기간) 2026년 6월 23일 ~ 6월 26일
- (참가규모) 약 5,000명 이상 지방정부 지도자
- 주요 정책 논의 주제
  - ①주거(Housing), ②지방재정 혁신(Transformative Local Finance), ③공중보건(Public Health), ④식량 시스템(Food Systems), ⑤지역 갈등 예방(Local Conflict Prevention), ⑥기후 정의(Climate Justice), ⑦문화(Culture), ⑧도시 기본 서비스(New Essentials)

윤 성 준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대전은 연구기관, 대학 등 과학기술 관련 우수 인프라 기반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며, 서울, 경기 등 다양한 지방정부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혁신 및 글로벌 협력 추진 중**

✓ **충남에서도 16개 타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원 가입 및 적극적인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경제적 및 정책적 역량 제고 필요**

울산광역시

"산업수도 울산에서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으로" 대전환 본격화

출처: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산업수도 울산에서 인공지능 수도 울산으로". 2026.02.24.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인공지능 수도 실현 위한 2026년 정보화 청사진 제시. 2026.02.26.

지능형 혁신수도로의 도약

- 60년간 축적된 산업 수도 울산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도시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 증대
-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데이터·현장·인재가 결집된 '인공지능 수도 울산'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과 시민 삶의 혁신 달성

주요 투자 규모 및 2026년 계획 수치

- 4대 전략 93개 세부사업에 총 1조 637억 원 투입
- 연구개발(R&D): 4,323억 원 / 인프라 조성: 4,084억 원 / 인력 양성: 1,438억 원 등
- 5개 분야 83개 사업에 총 445억 1,400만 원 확정 투입

'울산형 AI 비전' 4대 전략 및 2026년 정보화 시행계획

- 주력 제조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전반에 AI 도입 및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AI 팩토리' 전환 확대
- 시민 체감형 지능형 도시 서비스 제공: 재난안전·교통·복지 등 시정 전반에 AI 확산(AI 드론 인명구조, AI 돌봄 서비스 등)
- 지속 가능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SK-AWS AI 데이터센터 준공 지원 및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등 컴퓨팅 인프라 확보
-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울산인공지능위원회' 및 'U-NEXT AI 포럼' 중심의 민관 협력 강화와 규제 혁신 전담팀(TF) 운영

주요 투자 규모 및 2026년 계획 세부 현황

투자 분야	사업 수	투자 규모	핵심 사업 및 내용
연구개발(R&D)	20개	4,323억	초거대 산업 AI 연구지원, 선도기업 중심 AI 팩토리 전환 확대 등
기반(인프라)조성	17개	4,084억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ETRI 동남권 연구본부 유치, 로보캠퍼스 구축 등
인력 양성	12개	1,438억	피지컬 AI(실물 AI) 교육훈련 센터 구축, 유니스트 AI 대학원 연계 등
기업지원 및 서비스	44개	792억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온디바이스 AI 공공서비스 실증 확산 등

유 승 우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울산시는 ETRI 유치 및 UNIST AI 대학원 연계를 통해 기초부터 최고급 인력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AI 인재 성장 경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됨

✓ 충청남도는 울산의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조업 특화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도정 전반의 AI 전환을 위한 '충남형 AI 대도약 계획' 수립이 시급함

경기도

경기도, 2026년 'AI디지털 배움터' 대폭 확대

출처: 경기도청 보도자료, 경기도, 2026년 'AI디지털 배움터' 대폭 확대... 강사 약 250명 모집. 2026.03.17.

경기도 디지털배움터, 'AI 잘 쓰는 K-시니어' 교육 진행

경기도디지털배움터, 생성형 AI 활용한 강사 양성과정 운영

AI 디지털 배움터 교육 규모 대폭 확대,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 'AI디지털 배움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도민 누구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사업
- 경기도는 2026년부터 교육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AI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 예정

(사업내용) 청년·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역 기반 디지털 일자리 창출

- 이를 통해 지역 기반 디지털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청년, 취업취약계층 등 숨은 인력이 디지털 교육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계기로서 기대
- 경기도 내 총 69개소의 거점센터를 통해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AI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 AI실습형 교육 제공
-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디지털 교육 경험자, IT 관련 경력자, AI 관련 교육 이수자 등이며, 청년, 취업취약계층 등 우대 예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사·보조강사·가이드 등 250명 모집

- 전용플랫폼 구축: 2026년 6월까지 LG CNS와 협력하여 'AI·데이터 기반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학생별 맞춤형 학습 분석 서비스 도입 예정
- AI 선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350교, AI 중점학교 200교를 운영하여 미래 교육 모델의 본격적 확산
- 미래형 직업교육 연계: 공지능 기반의 직업교육 모델과 연계하여, 취업 준비생이나 소상공인이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특화 과정 신설

권 대 훈 충남라이즈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의 시·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학, 혁신기관 등을 활용하여 충남형 AI 디지털 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AI교육 체계 구축

✓ 충남 RISE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중심 AI 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대학 → 시군 평생교육기관 → 지역 주민으로 이어지는 AI 교육 확산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AI·재생에너지·자치권 혁신 정책 전환과 충남 시사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6.03.06.
강원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6.02.05., 2026.02.19., 2026.02.23., 2026.03.10.

경제.미래산업

- (제주) 우주·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유치 인센티브 본격 가동, 하원테크노캠퍼스 중심 위성 생산·발사·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 AI 재난모니터링 시스템(5년간 200억 원) 등 스마트 안전 인프라 투자 진행
- (강원)「2026 투자유치 정책*」발표(2.18.), 민선 8기 이후 누적 성과(56개 기업·1조 8,644억 원·2,938명 고용) 중 미래산업 비중 58.9%

* ① 폐광지역 설비 보조금 30% → 40% 상향, ② 접경지역 범위 5개→7개 시군 확대 및 보조금 5%p 가산, ③ 투자보조금 최소 기준 10억 원으로 하향, ④ 고용 20명 초과 시 1인당 100만 원(한도 5억 원) 고용보조금 신설, ⑤ 지원 광물 10종→38종 확대

- 권역별 인센티브 차등 설계, 투자 문턱 완화

과학기술.디지털.에너지

- (제주) 도민이 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AI 기반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2035 탄소중립 대응 기술·인프라 확보, AI·디지털을 관광·농업·복지 전 분야에 결합 추진(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및 AI 농업 플랫폼 '제주DA' 고도화)
- (강원) '제조 AI 팩토리', '의료헬스 AX', '도민 AI 역량 확산' 3개 분야의 세부 사업 기획 진입(1월 말 도정 업무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AI·디지털 실증 특례 확보 병행 추진

- 스마트팩토리 AI 우선 적용,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의료헬스 디지털화

특별자치.법.제도 환경

- (제주) 생애주기·생활밀착·일자리·산업 분야 제도 개편을 도민에게 패키지 형태로 안내, 인구·복지·산업 계획이 연동되는 '정책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구조 정착 등 특별법 기반 제도 운영 안정화 단계
-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3차 개정안이 2월 국회 논의 무산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심사(3.11.) 및 추가심사(3.16.) 진행

- 정책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도입, 규제 실증 특례 선점

사회.복지.인구

- (제주)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추진을 위한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확정(3.5.),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장애인·노인 우선) 시행을 통한 '제주가치 돌봄 - 제주형 건강주치의' 연계 의료·요양·생활 통합 지원

* 총 132개 사업(27개 신규사업)에 4,150억 원 투입

- (강원) '청년이 머무는 강원'을 비전으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전반의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발표(2.5.)

* 향후 5년간 81개 사업·1조 3,380억 원 투입

- 인구정책 체계화, 통합돌봄 고도화,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화

농업.관광 디지털화

- (제주) AI 농업 플랫폼 '제주DA' 고도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데이터 연동·스마트팜 확산,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및 모바일 페이 기반 관광·상권 연결을 통한 관광 소비 지역 내 순환모델 운영
- (강원) 폐광지역 관광·지역상권 연계 인센티브 및 탄광 문화유산 기반 관광 자원과 첨단산업 유치를 결합하는 복합 전략 제시(2월 투자유치 정책)

- AI 스마트팜 파일럿, 서해안 디지털 관광증 도입

강 수 아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2026년 하반기 충남 미래전략 재설계 시, 권역별 인센티브 차등 조례 설계·인구정책 및 통합돌봄 체계 재설계·스마트팩토리 AI 적용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연계 등 제도·복지·산업 3개 분야의 정책 과제 우선 검토를 제안함**

✓ **특히 AI 농업 플랫폼 및 서해안 디지털 관광 파일럿 도입, 규제 실증 특례 선점을 통해 충남형 특별자치 기반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충청북도

충주 수안보온천관광특구, 2025년 관광특구 평가'우수'

출처: 충북일보. 2026.02.25.

수안보온천관광특구의 '우수' 등급 획득 및 웰니스 관광지 도약

- 충주 수안보온천관광특구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2025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에서 총점 87.8점을 기록하며 '우수' 등급을 획득
- 전년도 '보통'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로, 1,500년 역사의 온천 자원을 활용해 중부권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체류형 웰니스 관광 거점 강화 및 접근성 확대

-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과 인근 자원 연계 코스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 KTX 수안보온천역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대 접근 가능
- 향후 고품격 온천 시설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중부권 대표 웰니스 거점으로 지속성장 계획

관광환경 개선 및 웰니스 기반시설 확충

-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노후 관광 시설을 정비하고 보행 환경 및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등 관광 환경의 내실을 강화
- 기존 온천 자원에 의료 기능을 더한 웰니스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온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추진

수안보온천관광특구, '2025년 관광특구 - 수안보파크호텔 노천탕 전경. 충주시

지역 특색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다각화

- 국악 체험 등 수안보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 및 관광 홍보 마케팅을 확대하여 주말 단기 여행객과 MZ세대 등 다양한 관광 수요를 유입시키는 데 집중

수안보온천관광특구, '2025년 관광특구 - 수안보 유원재 전경. 충주시

오 정 민 과학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 지역 내 온천 지구도(덕산/온양/도고 등) 단순 목욕 중심에서 의료 및 치유가 결합된 웰니스 시설로 고도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연계한 체류형 체험 콘텐츠 강화 필요.

경상북도

경북형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본격 가동

출처 : 경상북도 보도자료, 경상북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복지부 공모 최종 선정. 2026.03.10.

경북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전국 최대 면적 대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한 경북의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을 위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동력 확보

8개 거점 의료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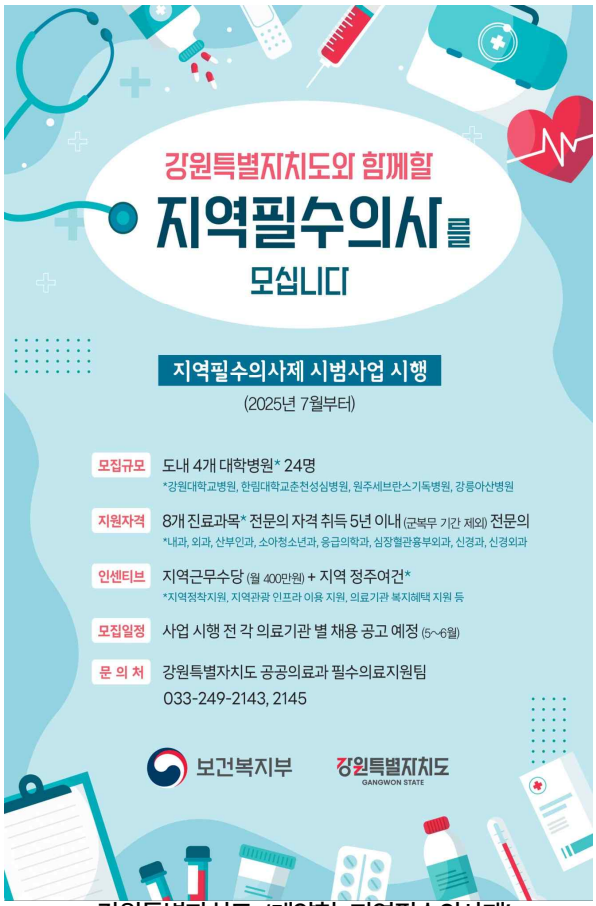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5~10년간 필수진료과목을 진료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근무 및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임
-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을 비롯하여 칠곡경북대학교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거점병원 등 총 8개 거점 의료기관에 필수과목 전문의 2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한 정착 지원

- 경북도는 2026년부터 5년간 총 53억 원을 투입하여, 채용된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관사 지원 및 자녀 보육료·학자금 지원 등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정주 혜택 제공
-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의사가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 등을 포함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공급 체계 전환

-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의료 공급구조 개선으로 필수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한 전주기적 관리와 정착 프로그램 연계로 정책 실효성 제고하고, 장기적인 의료 생태계 조성에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신 주 희 충남라이즈센터 선임연구원

- ✓ 충남 RISE 체계를 기반으로 대학-지역 거점병원 간 임상 교류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의료진이 지역 내에서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진료 환경 조성 필요
- ✓ 주거·교육·연구 인프라를 통합한 '종합 정주 지원 정책' 마련으로 우수 의료 인력의 자발적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 및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충남형 지속가능 필수의료 공급 체계 마련 필요